

30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해설

담당 : 법무사 최재용

【문36】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 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 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 ① 서면결의 등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결의 등의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자기주식을 소유한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③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1인 주주라는 사실을 등기관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때에는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이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업무집행조합원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36 해설 - ⑤】

- ①③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제정 2018. 9. 14.]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 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 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 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 2.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 3.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

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② [상업등기선례 제202406-1호, 제정 2024. 6. 20.]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자기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도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④ [상업등기선례 제201901-2호, 제정 2019. 1. 31.] 1인 주주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1. 1인 주주가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의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현실로 개최하여 임원의 해임을 결의하고 작성된 의사록에 인증을 받는다면 이를 임원 해임등기의 첨부정보로 제출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제130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2.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상법 제363조 제4항의 절차(서면결의 등)를 밟는다면,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법인등기선례 제201809-3호 참조).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1인 주주라는 사실을 등기관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때에는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는 첨부할 필요는 없다.
- ⑤ [상업등기선례 제202312-1호, 제정 2024. 6. 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은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그 조합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조합계약서 등)과 업무집행조합원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개인인감을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다만, 수인의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임한 경우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총회 또는 조합원총회의사록이 요구될 수 있음).

【문37】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회생법 제242조 내지 제245조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력이 발생한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채무자인 법인 또는 새로운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다.
- ② 관리인 및 관리인대리와 파산관재인 및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는 회사의 등기기록 중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하고, 이러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한다.
- ③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대표자가 새로운 이사 등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한 파산종결등기를 할 때까지 종전 이사 등의 퇴임등기를 할 수 없다.
- ④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계획인가·불인가, 회생계획인가취소, 회생절차폐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 및 파산선고,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등기하여야 한다.
- 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 본점이전의 등기는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문37 해설 - ②】

- ①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채무자인 법인 또는 새로운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2항).
- ② ③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는 임원란 또는 사원란에 등기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와 지배인 또는 대리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5조 제2항).
- ④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계획인가·불인가, 회생계획인가취소, 회생절차폐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 및 파산선고,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등기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
- ⑤ [상업등기선례 제1-134호, 제정 2004. 2. 4.] 단,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으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38】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절차 및 그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주를 발행하는 당해 회사에 대한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②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 ③ 주금의 납입을 상계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상계는 주금납입채무의 전부에 대해서 하여야 하고 주금납입채무의 일부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 ④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만 첨부하면 되고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⑤ 신주발행시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현물출자자 간에 작성된 현물출자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문38 해설 - ③】

- ① [상업등기선례 제1-208호, 제정 2002. 8. 26.] 주식회사에서 현물출자의 목적물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재산이면 모두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 후 신주발행시 당해 회사에 대한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② [상업등기선례 제2-57호, 제정 2012. 8. 20.]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
- ③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상업등기법」 제82조 제5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제4조).
- ④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제정 2002. 6. 24.]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 외에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으로 하고 있지 않다.
- ⑤ [상업등기선례 제2-42호, 제정 2007. 1. 10.]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뿐만 아니라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이 신주의 인수인이 작성한 주식인수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회사 간의 신주인수계약서, 주주명부 기타 주식의 배정 상황(각 인수인에게 배정한 주식의 수)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문39】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의 공고방법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가 공고방법을 둔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다.
- ② 상법 제585조에 따른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 하는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작성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각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④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에 따른 등기는 자본금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신청하여야 하는데, 출자의 납입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할 필요가 없으며, 현물출자의 이행의 경우에도 검사인 등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⑤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도 본점이전을 할 수 있다.

【문39 해설 - ①】

- ① 유한회사의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등기사항도 아니다(상법 제549조 제2항).
- ② 상법 제585조에 따른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이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법 제585조 제1항, 제2항).
- ③ 유한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543조 제3항, 제292조)
- ④ 회사의 대표자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91조, 상등법 제23조 제1항). 또한,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납입기관에 제한이 없어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아니라 대표권 있는 이사가 납입을 받는 것도 가능하며, 현물출자의 이행의 경우에도 검사인 등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⑤ [상업등기선례 제202203-1호, 제정 2022. 3. 2.]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상법」 제564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도 본점이전을 할 수 있다.

【문40】 주식회사의 사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등기사항이다.
- ②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하며, 각 사채의 금액은 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③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증을 거쳐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온라인상 발급받은 전환청구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가 전부상환 또는 전부매입 소각되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말소등기신청서에는 상환완료 또는 전부매입소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사채상환완료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사채권자의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40 해설 - ②】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등기사항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 제6항).
- ②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각 사채의 금액은 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규정은 폐지되었다(구상법 제471조, 제472조).
- ③ [상업등기선례 제2-66호, 제정 2007. 9. 11.]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증을 거쳐 예탁원으로부터 온라인(on-line)상 발급받은 전환청구서(발급번호에 의하여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가 전부상환 또는 전부매입 소각되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말소등기신청서에는 상환완료 또는 전부매입소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상등규 제144조 제2항).
- ⑤ [상업등기선례 제2-64호, 제정 2007. 1. 10.]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사채를 전부 상환한 후 전환사채가 전부 상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사채권자의 확인서(이하, ‘사채상환완료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전환사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는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사채상환완료증명서를 작성한 자가 사채권자임을 소명하기 위해 사채인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고유번호증은 원칙적으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41】 등기의무해태와 관련하여 과태사항 통지와 과태료사건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 ② 과태료 사건의 관할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인 회사 대표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다.
- ③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써 불복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④ 등기해태에 대하여 신청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등기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등기관은 과태사항을 통지할 수 없다.
- ⑤ 회사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과태사항 통지를 하지 않는다.

【문41 해설 - ④】

- ① 【대법원 2009. 4. 23.자 2009마120】 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바(상법 제183조),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 ②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법 제247조).
- ③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비송법 제248조 제1항). 이렇게 정식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법 제248조 제3항).
- ④ 등기관은 그 직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상등규 제176조). 범죄에 대한 제재인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고, 위반자에게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가 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 ⑤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제2조①예시(ㄱ)).

【문42】 등기사항과 등기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상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상법 제22조)의 변경등기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 ②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은 지배인을 두지 않은 본점소재지에서는 할 수 없다.
- ③ 외국회사의 영업소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을 등기하므로,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등기사항을 등기하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없을 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대항할 수 있다.
- ⑤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진실과 다른 내용이 등기되더라도 그 등기사항을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문42 해설 - ④】

- ①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등 상대적 등기사항일지라도 일단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절대적 등기사항에 해당하게 된다(상법 제40조).
 - ②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제5호에 의하여 ‘당해 분사무소나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지점의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③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614조 제2항).
- [상업등기선례 제202304-1호, 제정 2023. 4. 17.] 외국회사의 영업소는 국내회사의 지점과 달리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에서 정하는 지점의 등기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등기한다.
- ④ 등기사항은 이를 등기하기 전에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한 후라 할지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2항).
 - ⑤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진실과 다른 내용이 등기되더라도 그 등기사항을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21). 다만, 상업등기는 등기된 사항이 진실하다는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지며, 상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23조 제4항).

【문43】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거나, 주식을 임의소각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줄이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②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나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③ 자본금의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나,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 ④ 주식의 액면가는 균일해야 하므로 일부 주식에 대해서만 액면가를 낮출 수 없고,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100원 미만으로 액면가를 낮출 수 없다.
- ⑤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감소된 주식수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는 것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문43 해설 - ②】

- ①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액을 임의로 낮추는 경우,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액면가액을 인하하는 경우(상업선례 제1-188호), 임의소각하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상업등기실무Ⅱ, 2017, 법원행정처)
- ② 통상의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이 유출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상법 제439조 제2항 본문, 제232조),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에 변화가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 않는다(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제정 1991. 8. 1.]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회사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서,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
- ③ 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438조 제1항).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상법 제438조 제2항, 제368조 제1항).
- ④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므로(상법 제451조 제1항)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으로는 ① 액면가액을 인하하는 방법, ② 발행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③ 양자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100원 미만으로는 인하할 수 없다(상법 제329조 제3항).
- ⑤ [상업등기선례 제2-55호, 제정 2012. 7. 9.]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수가 없다.

【문44】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이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②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등기기간은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로부터 기산하지 않고 후임이사의 취임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할 수 없다.
- ③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가 없이는 새로운 이사의 선임을 승인하는 안건이 포함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
- ④ 등기사유로서 주주총회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특별이해관계인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해관계 없는 대리인을 통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44 해설 - ⑤】

- 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인적 개성이 인적 개성이 중요하므로 자연인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예외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197조, 제198조).
- ②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③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가 없이는 새로운 이사의 선임을 승인하는 안건이 포함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 ④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특별이해관계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법 제371조 제2항).
- ⑤ 특별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를 따르지 않더라도 유효한 의결권행사가 되기 때문에 대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문45】 해산 및 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여 관보에 공고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해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한다.
- ② 정관에 기재된 해산사유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③ 해산판결과 달리 해산명령은 공익상 회사의 존속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감사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 ④ 일시이사는 법정청산인이 될 수 없다.
- ⑤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문45 해설 - ①】

- ①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상등법 제73조).
- ②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은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 ③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의 신청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감사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상법 제176조 제1항).
- ④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531조 제1항). 위의 이사에는 퇴임이사, 일시이사, 직무대행자도 포함된다.
- ⑤ 회사계속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한다(상법 제519조, 제520조의2 제3항).

【문46】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모집설립의 경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10조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사와 감사가 이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한다.
- ③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자본금 총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모집설립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 전원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문46 해설 - ④】

- ①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295조 제2항).
- ② [상업등기선례 제1-95호, 제정 2003. 2. 25.] 현물출자가 있는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까지 그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하는바, 상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의 대상에는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의 내용만이 포함되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것은 같은 법 제3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가 이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다.
- ③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주금납입보관증명서”).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상법 제318조 제3항).
- ④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98조 제1항).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상법 제298조 제2항).
- ⑤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 시행령 제37조의3).

【문47】 민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고, 그 이사 외에 대표권을 가지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④ 법원의 소집허가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적법하게 개최된 이상 원칙적으로 소집허가결정과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사항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결의할 수 있다.
- 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도 대표자는 여전히 대표권을 가지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문47 해설 - ③】

- ①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포함한다.
-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64조). 따로 대표권을 가지는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그 사항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할 수 있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 ③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④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하여 개최된 중중 임시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 ⑤ 중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중중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중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문48】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대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심문은 공개하지 않고,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의 기간은 채권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⑤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으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48 해설 - ⑤】

-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보전행위를 제외하고 법원의 허가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민법 제404조).
- ②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법 제46조). 신청은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비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61조).
- ③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심문의 비공개(비송법 제13조) [11회][23회], 검사의 참여(비송법 제15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비송법 제52조).
- ④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법 제50조 제1항). 이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비송법 제50조 제3항).
- ⑤ 대위신청을 허가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고지할 뿐만 아니라(비송법 제18조 제1항)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비송법 제49조 제1항). 이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비송법 제49조 제2항).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법 제50조 제2항).

【문49】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인 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 변경등기를 마쳐야 한다.
- ②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 ③ 회사등기의 신청인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고, 이렇게 선임된 일시대표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로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를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 새로운 대표자가 권한을 가지므로, 회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임기만료로 퇴임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도 일시이사의 선임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49 해설 - ③】

- ① 회사나 민법법인, 특별법에 의한 법인 등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법인등록번호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조직변경 등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설립된 법인에 법인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상등법 제15조).
 - ③ 일시이사는 권한에 제한이 없이 통상의 이사의 권한과 같다(대법원 1968. 5. 22.자 68마119).
 - ④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2항).
- [상업등기선례 제201905-2호, 제정 2019. 5. 13.]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만이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참조).
- 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386조 제2항). 일시대표이사의 권한은 본래의 대표이사의 권한과 동일하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50】 전자증명과 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②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과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은 등기신청권한이 없으므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변경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내용과 전자증명서에 기록된 내용이 서로 달라진 경우라도 전자증명서를 변경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 ④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송신할 때에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를 송신할 필요가 없다.
- ⑤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잔고증명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50 해설 - ④】

- ①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4호).
- ②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은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4호).
- ③ 변경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내용과 전자증명서에 기록되는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변경 발급받아야 한다(상등규 제49조 제1항).
- ④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제2항의 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단서의 첨부정보를 송신하는 경우(‘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제4항).
- ⑤ **첨부정보 중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제5항).